

# 특전사령관 “尹, 문 부수고 의원 끼집어내라 지시”

### “1일 ‘국회 등 6곳 확보’ 임무 받아...계엄 관련자들 말 맞춰” “옳지 않다 판단해 중지...대통령에게 조치사항 보고 안 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끼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곽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하셨다”며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끼집어내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시사항을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쏘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었고 현장 지휘관은 ‘안 됩니다, 제한됩니다’라고 제게 분명히 얘기했다. 저도 그 부분이 분명히 맞고 옳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함께 출석한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사령관에게) ‘더이상 무리수 두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사령관은 ‘알겠습니다, 하지 마라’라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실사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 작전

병력들이 나중에 범법자가 되는 문제와 강제로 깨고 들어가면 너무 많은 인원이 다치기에 차마 그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래서 현 위치에서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말라고 중지시켰다. 중지시키고 이동하는 상황을 보고만 하고 뒤이 상작전하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조치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보고 안 했다, 철수할 때 전임 (김용현) 장관에게 현 상황을 설명드리고 철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지난 6일에는 윤 대통령과 한 차례 통화했고,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병력 위치를 물어 “국회로 이동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에서 그는 의원이 집안에 윤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제한된다”고 하다가 오후 국방위에서 내용을 공개했다.



비상계엄 선포때 계엄사령관 역할을 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경위 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뒤쪽은 내란에 관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함께 계엄 핵심 인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오른쪽)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왼쪽) 등 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그는 두 번째 통화 시간에 대해 “제가 간 때문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사령관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에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일 지시받은 내용과 관련해 “제가 받은 임무는 국회, 선관위 셋(3곳), 민주당,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면서 “임무를 전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유선 비화폰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곽 사령관은 “머릿속으로만 ‘정말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구상 정도만 하다가 차마 그 말을 예하 여단장들에게 하지 않았다”며 “말하게 되면 여단장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당일 투입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저는 이게 비상계엄이 아니고 당시 전방에서 어떤 상황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는 가능성이 더 염두가 되는 상황 인식이 더 컸다”고 해명했다.

곽 사령관은 대통령 ‘총, 발포, 공포탄, 장갑차’ 등 단어를 썼느냐는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다”고 했다. 함께 출석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같은 질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병계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이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세계 공익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계엄 동시수사 혼선...검찰·경찰·공수처, 수사협의회 가동

### 경찰 “3개 기관 참석한다면 안갈 이유 없어”...공수처 “참석 예정”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과 군 수뇌부, 경찰 지휘부가 모두 관여한 내란 혐의 사건 수사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아 수사기관들이 동시다발 수사를 벌이면서 중복·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는 상황에서 일단 머리를 맞대는 모양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에 공문을 보내 수사 관련 협의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 국수본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역시 “대검찰청과 국수본이 참여하는 협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다만 참석자와 일정 등은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수사 협의 제안에 경찰과 공수처가 모두 응하겠다고 답하면서 조만간

3개 수사기관은 수사 협의체 가동을 위한 대면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각 기관은 협의 일정을 조율한 뒤 개괄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합동 수사에 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인 경찰이 수사 주체가 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경찰 측에 계속해서 합동 수사를 제안해왔다.

반면 경찰은 ‘내란죄’의 직접 수사가 경찰 소관인 만큼 국가수사본부가 정당한 수사 주체라는 입장이었다.

이에 앞서 대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국수본 측에 합동 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경찰이 이를 거부해 무산됐다.

그러나 수사 주도권을 놓고 수사기관 간 경쟁이 과열될 경우 혼선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법원이 중복 수사를 이유로 공수처가 신청한 영장

'계엄수사' 공수처·검·경 수사상황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특별수사본부)	경찰(국가수사본부)
주요 고발 대상, 내란(일부반란) 직무유기 혐의 등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 서울청 공안안전부 차장, 서울청 경비부장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김현태, 이상민, 조지호 등 군 경찰 간부 9명	윤석열, 김용현, 박안수, 이상민, 조지호, 김봉식 등
12월 3일 수사 착수 5일 수사 4부 배당	5일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1부 내란죄 적용 계엄수사 배당 및 김용현 출국금지	5일 안보수사단 배당 및 김용현 출국금지
6일 김용현 영장 청구(법원, 중복 청구 등 이유로 기각)	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신규 설치	6일 전담 수사팀 120여명 구성
8일 김용현 관련 사건 이첩 요청	8일 김용현 긴급체포·재소환 조사, 휴대전화 압수 및 이상민 출국금지	8일 김용현 공판·점무실 및 통신 내역 압수·통화 내역 확보, 휴대전화·PC·노트북 등 압수, 이상민·여인형·박안수 출국금지
9일 비상계엄 수사 TF 구성, 이상민, 김용현, 윤석열 출국금지	9일 국군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김용현 3차 소환·구속영장 청구	9일 여인형·이상민 등 소환 통보
	10일 김용현 영장실질심사(법원), 구속 여부 결정 예정	

들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도 수사 협의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도 처장이 직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답변 과정에서 현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수

사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수사 이첩을 요구하면서도 합동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전날 대검과 사건 이첩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김용현이 선관위에 정보사 병력파견 지시”

### 정보사령관 “21시부터 인근 대기...특수임무 수행 부대도 대기”

문상호(육군 소장)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문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해 김 전 장관 지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영관급 요원 10명을 파견했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답했다.

그는 “(계엄 선포) 당일 오전 10-11시쯤 지시를 받았다고 기억한다”며 “첫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시켜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첫 지시 이후 ‘당일 야간에 임무를 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고, 그 지시를 받을 당시에 ‘과천 정부청사 인근에 한 기시 야간에 대기할 수 있도록

하리’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 사령관은 다만 “HID(특수임무대)를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는가”라는 질의에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정보사)가 받은 임무는 선관위에 가서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고 그곳을 지키고 있다가 다른 팀이 오면 인계해 주라는 것이었다”며 정보사 선관위 출동팀에 전산실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지시는 자신이 내렸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속초에 있는 HID 7명은 누가 오라고 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질의에도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그는 “100여단은 누가 대기시켰냐”는 박 의원의 추가 질의에는 “제가 장관님께 임무를 받고 지시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 “여인형 사령관, 정치인 체포·구금 지시”

방첩사 수사단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문에 출석해 “구금 시설 및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여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구금시설에 대해 “처음 지시받기로는 BI 병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언급했다.

BI 병커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관할 지휘통제 병커로, 유사시 우리 군의 실질적인 전쟁 지휘부 역할을 맡는 군 사상 핵심 시설이다. /연합뉴스

여 사령관이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및 구금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방첩사 내부에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가정보원 홍장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 경찰, 한덕수 피의자 소환 통보...“거부시 강제수사”

### 국정수습 맡을 총리도 수사선상...‘계엄국무회의’ 멤버 줄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0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의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대신 국정을 수습해야 할 총리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 등 국무위원과 조태웅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며 이 중 1명은 소환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출석 대상 중 최고위급인 한 총리의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된 바 있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아직 내려지지 않았지만, 수사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무회의에는 한 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

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배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국무위원(장관급) 19명 등 총 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연합뉴스

##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박 장관과 조 청장에 대해 ‘12·3 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

는 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정부 주요 인사(박 장관)가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이는 내란 행위 계획과 실행에 전방위로 관여했음을 뒷받침한다”고 주

장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조 청장에 대해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진수 기자

## 국회, ‘내란혐의자 신속체포 요구’ 결의안 채택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 의원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7명, 기권 3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중 조경태·박덕흠·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4명이 찬성 투표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 대상에 포함됐다. /김진수 기자